

버티고 버티다 결국 빛더미... 눈물의 '코로나 파산' 봇물

광주지법 파산 법정 가보니

2일 오전 광주지법 법정동 3층 303호 법정 앞. 재판이 시작되는 오전 10시를 앞두고 30분 전부터 파산 절차를 밟으려는 신청자들로 법정 앞은 북적였다. 재산보다 빚이 많고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의 심사를 거쳐 빚을 탕감해 주는 게 파산 제도다. 결국, 파산 법정을 찾는 이들은 벼랑 끝에서 버티고 버티다 두 손을 든 시민들이다.

이러다보니 얼굴엔 부끄러움, 미안함, 걱정이 가득하다. 고개를 숙인 채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 꺼리는 듯한 신청자들도 눈에 띄었다. 법정 앞에서 만난 70대 남성은 "여기까지 오는 게 참 복잡했다"면서 말 끝을 흐렸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0분-1시간 간격으로 모두 137명에 대한 파산선고기일을 열고 파산선고 결정을 했다. 지난날에도 216건의 개인파산 신청이 이뤄졌다.

울들어 개인파산 신청 937건 대부분이 자영업자·실직자들 코로나 장기화에 벼랑 끝 몰려 "면책 받고 재기 기회 되었으면"

2일 광주지법과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울들어 5월까지 광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937건. 전년도 같은 기간(805건)에 견줘 16.4%가 늘었다. 4월까지 757건이 접수돼 전년도 같은 기간(606건)보다 24.9%가 증가한 것에 비해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증가세다. 3년 간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울 들어 지난 4월까지 146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561건)보다 줄어 들었다. 일자리도 없어 소득나올 데가 없다보니 빚을 갚아나가는 회생 대신 단 한 번의 '빛잔치'로 끝내는 파산 신청이 많아졌

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지방법원 소속 한 파산 관재인은 "개인 파산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 자영업자·실직자들로 코로나 장기화로 빚을 못 갚고 버티다못해 온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날도 법정에 앉은 신청자들은 20대 젊은이부터 50-60대 아주머니, 70대 할아버지 등 다양했다.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말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A씨 부부의 경우 2016년 대출을 받아 카페를 운영하다 인건에 생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밀려면서 매출이 줄었다.

이들은 부업으로 확원 차량까지 운행했지만 대출금, 카페 유지비, 카드 대금을 갚아 나가기 힘들어 개인회생을 신청, 매월 조금씩 갚아나가려 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면서 뜻대로 되지 않아 결국 폐업했고 변제금도 갚지 못하면서 개인회생도 폐지되자 파산 신청을 했다.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빚 전체를 바로 탕감해주는 게 아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 신청자들이 제출할 서류도 30가지가 넘는다. 2개월 간 채권조사를 거쳐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과거 10년 간 소득증명, 5년 간의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비롯해 휴·폐업, 납세, 보험가입내역을 내야 하고 이혼한 가족들에 대한 서류까지 챙겨야 한다.

몇 년 전 그만 둔 회사에 연락, 파산 신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거나, 이혼으로 연락이 소원했던 자녀들에게 자신의 경제 상황을 알리기 싫다며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법원 인근에서 만난 한 파산관재인들 귀띔이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파산 선고 뒤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말하는 경우, 허위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말해서 빚 탕감 못하면 어떻게할까' 걱정하다 거짓말하시면 안됩니다. 재산 상태 조사하게되면 다 드러나니 사실대로

얘기하시고 같이 고민해서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파산 선고 후 숨겨둔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빚을 탕감(면책)받을 수 있는데, 거짓 파산 신고가 난 뒤 '면책' 결정을 받아내지 못하면 빚은 고스란히 남고 온갖 서류를 제출하면서 시간만 쓰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도.

파산 관재인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있다 불안함을 느낀 참석자들의 얘기가 의자 등받이에서 떨어지며 앞으로 쏟아졌다.

또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복권(면책 결정 확정 포함)을 받기 전에는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등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파산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는 대상자들은 재판장과 파산관재인의 한 마디에 집중했다. 파산선고를 받은 남성은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준비할 서류도 많지만 불안정한 일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다시 일어서지 않겠냐"며 법정을 나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도 진상 규명에 초점

전두환(90)씨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도 1980년 5월 진상을 규명하는 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광주에 배치된 계엄군을 증인으로 세우는가 하면, 북한군 개입설과 헬기 사격설, 비무장 민간인 살상과 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주장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고법 민사2-2부는 2일 5·18 기념재단, 3개 5월 단체,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씨 측은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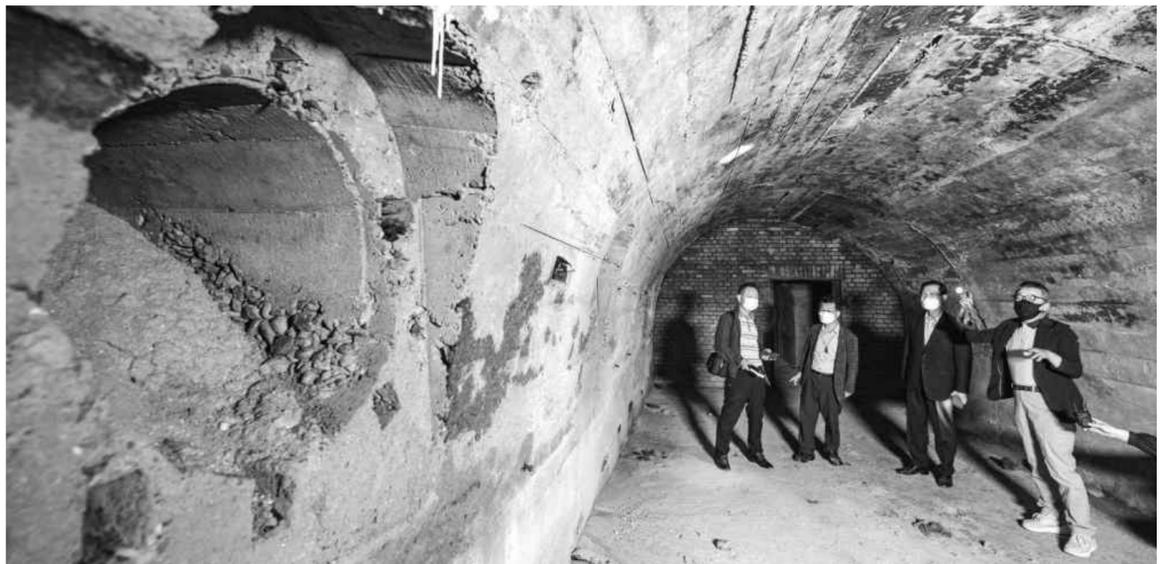
명예훼손은 없었다며 항소했고 5·18 단체 측도 시민군 장갑차에 계엄군이 사망한 것처럼 기재한 내용 등을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 부대항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으로 옛 전남도청에 투입됐던 이경남 목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고 전씨 측은 공식 서류로 판단하거나 다른 계엄군들을 조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 목사는 당시 11공수부대 63대대 소속으로, 기고를 통해 사망한 일병이 후진하는 군인 장갑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깔렸다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이 목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후 세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어 다른 사안들을 신문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505보안부대 옛터에서 일제강점기 방공호로 추정되는 미확인 지하시설이 발견돼 조성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장 전 운전기사 비위 의혹 수사 확대되나

수행비서 등 3명 추가 입건

이용섭 광주시장 전 운전기사 비위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경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예의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광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공직자 신분을 활용해 금전적 이득을 받은 혐의(청탁금 지법 위반)로 이 시장의 전 운전기사 A씨를 입건한 데 이어 현재 수행비서와 고품품 제공 의혹을 받는 민간인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앞서, A씨는 이용섭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편의 제공을 대가로 제 3자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아 타고 다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이 고소장을 토대로 A씨 외에 다른 공직자들의 연루 의혹을 수사해오다 추가 혐의를 찾아내 다른 공직자들을 입건했다는 점에서 수사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안팎의 분위기다. 경찰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청탁 금지법이 아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에 대한 수사를 거쳐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시작했고 수행비서도 대기 발령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와관련, "제 비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조그마한 비위사실이라도 드러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505보안부대 옛터서 지하시설 발견...용도는?

일제 방공호 추정...학술조사 필요

광주 505보안부대 옛터에서 미확인 지하시설이 발견됐다. 시민단체가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방공호라고 주장하고 있어 학술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505보안부대 옛 터에서 발견된 지하시설에서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개된 지하시설은 옛 505보안부대 정문 주차장 가장자리 옹벽 하단부에 입구가 위치하고 있다. 흙으로 절반 가량이 막힌 입구에 들어서면

경도처럼 폭이 좁고 천장이 낮은 통로가 펼쳐지고 내부로 들어가면 30명 이상 운집할 수 있고 천장이 통로보다 2배 이상 높은 공간과 만나게된다.

공간 옆에는 규모가 4분의 1가량인 다른 지하시설이 하나 더 존재한다. 통로와 지하공간의 벽면, 천장은 모두 시멘트로 지어졌고 벽면은 목재가 뼈대처럼 박혀있었다.

시민모임은 현장을 돌면서 건축 재료와 공법에서 일제강점기의 특징을 볼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방공호로 추정했다. 이국인 시민모임 대표는 " 그동안 광주에서 발견된 일제 시설물과는 내부 구조가 전혀 다

르다"면서 "유사 상황에서 군 지휘소 기능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였던 것으로 유추된다"며 구축 경위·용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옛 505보안부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수많은 시민이 투옥되고 혹독한 고문을 받았던 공간이다. 이곳에 주둔했던 국군 기무부대가 2005년 육군 31보병사단으로 옮겨가면서 수년간 방치된 옛터는 2007년 5·18 사적지 제26호로 지정됐다. 지금은 5·18 역사공원으로 거듭나 분관, 위병소, 정문, 면회실, 식당 등 일부 시설이 원형 복원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h3>상가매매 (상무지구)</h3> <p>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6천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앞 ☑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 ☑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p>010-6670-9800</p>	<h3>신축원룸(매매)</h3> <p>월 수익 750만원 연 수익 9천만원 →매매가 13억원 (용 6억5천만원)</p> <p>★4개동(월수익 3천)년 4억 / 매가 52 (용 25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실 없음, 임차인 한시 대기 (관리 회사에서 해드림) ☑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부근 대산항 10분 소요 <p>010-4667-9820</p>	<h2>광주보청기 난청센터</h2> <h1>보청기</h1> <h2>무료체험</h2> <p>직접 체험 후 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p>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p>
--	---	---